



검수완박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2면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11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 위험을
더 키울 것 3면

프랑스 대선

인종차별 반대 시위
6~7면

결선 투표 논쟁 7면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16면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인 방법?

8~10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도킨개킨이다

착각은 금물이다

관련 기사 2, 11면



검찰



검수완박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김문성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국가의 강제수사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민주 개혁과도 관련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임기 초에 검찰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비리 수사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을 견제하며 조속히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입법이 그것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한다. 현 검찰에는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여럿 남아 있다.

권력다툼

윤석열은 민주당에 대한 반격으로, 문재인 정부 비리를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할 특검을 꾸려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검수완박 대결은 새 정부 초기에 검찰을 무기로 삼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 칼을 무디게 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 예봉을 피해 보려는 민주당 간의 권력 투쟁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은 양측 누구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입법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도 찬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검수완박 대신 검찰개혁특위를 꾸리자는 정의당 중재안은 신기루 좇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수완박론도, 검찰 옹호론도 지지해선 안 된다

검수완박은 왜 공상인가

민주당은 현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검찰 조직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듯함에도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공상이다. 첫째, 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도 국가의 독점적 강제력인 수사권·기소권의 총량은 줄지 않는다.

강제 수사와 기소(검사가 재판에 피의자의 유죄를 청구, 재판과 처벌(각종 기본권 제한과 인신 구속)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정한 질서를 대중이 강제로 따르게 하는 사회 통제 기능이다.

그래서 현재의 검찰에게 이 권한들을 빼앗아 봐야 그것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들이 생기거나 경찰의 수사권력이 더 강화되거나 하는 식이다. 이는 민주적 권리들의 신장과는 상관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권을 줄여야 한다더니, 그 결과물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였다. 검찰의 수사 영역 하나를 떼어서 새 기관을 만든 것이다. 지금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도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 부패

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검찰2, 검찰3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을 청구하는 것이다. 수사는 그 기소를 위한 전 단계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내리는 공소권자(기소권을 독점 보유한 검사)가 일선 수사관에 대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수사권이 있나 없나

그러므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쪽이나 그것이 박탈되면 큰일난다는 쪽의 대립은 상당히 허구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반대론자들은 검수완박의 피해 사례로 최근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을 든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단순 실족사로 결론) 때문에 검찰이 살인 의혹을 감지할 수 없었다는 사례를 든다.

그러나 22년 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경찰이 억울한 피의자 최

모 씨를 폭행 고문해 가짜 자백을 받아 검찰에 넘겼을 때, 해당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의 보고 그대로 기소했던가?

결국 민주당은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를 개혁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 의원 배신에 실망해 민주당에 등을 돌렸거나 돌릴 뻔한 개혁 의원층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의 권력 투쟁에 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지층 결집하려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기극이 가능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쌓여 온 검찰에 대한 대중의(정당한) 불신 덕분이다. 검찰은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또한 자신들의 특권과 영전을 위해 흔히 권력을 오·남용해 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당하지만, 엉뚱한 환상을 심어 주거나, 권력가들끼리의 정쟁에 개혁 의원과 열정이 낭비만 되는 이런 사이비 개혁 구호는 대중의 진정한 개혁 의원과 운동에 해롭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 위험을 더 키울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인 나토의 동진을 추진한 것이 범죄적일 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리석음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을 나토로 끌어들이려 애쓴 데에서 두드러졌다. [전쟁까지 벌어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실제로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옛 소련 소속의 세 공화국, 즉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발트3국'[발트해 연안 3국]은 나토에 가입했다. 이 세 국가와 핀란드는 차르 제국 시절 러시아에 병합됐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 시기에 독립을 쟁취했다.

제2차세계대전 초, 당시 소련 스탈린 정권은 나치 독일을 상대로 완충지를 확보하는 데에 골몰했고, 이 국가들을 다시 병합하려 했다. 핀란드의 경우, 병합에 실패했다. 핀란드를 상대로 벌인 1939~1940년 "겨울 전쟁"에서 소련군은 꺾대가 꺾였는데, 그 전쟁은 점차 푸틴의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발트3국 병합에는 성공했다. 발트3국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후 부리나케 미국 편에 붙었다.

발트3국은 저 유명한 나토 헌장 5조에 눈독을 들였는데, 그 조항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서로를 전쟁에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

이 세 국가들은 러시아의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속국 벨라루스에 가로막혀 나머지 유럽연합·나토 동맹국들과 거의 완전히 단절돼 있다.

이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전쟁 위험뿐이다. 그런 위험천만한 보장책에 선불리 기대를 걸기 전에 미국이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시켰던 데에는 러시아가 너무 허약해서 맞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주듯, 나토의 확장은 위험하고 파괴적인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이 침공이 야기한 나쁜 결과 하나는 몇몇 국가들, 대표적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논의를 부추긴 것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확장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 침공이 야기한 나쁜 결과 하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논의를 부추긴 것이다.

다.

스웨덴의 지정학적 궤적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의 다른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과 구별된다. 양차 세계대전 때 스웨덴은 참전하지 않았지만, 무역 파트너이자 이웃한 강대국인 독일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다.

냉전기에도 스웨덴은 중립을 지켰지만 그때는 서방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는데, 부분적 이유으로는 세계 시장에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나토에 가입했다. 다만, 나토군 주둔과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모면할 구실을 여럿 달았다. 핀란드는 1939~1940년 전쟁에서 커다란 대가를 치르며 소련을 격퇴하고서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에 동참했다.

1945년 이후 핀란드는 미소 양국의 합의에 따라 냉전에서 중립이 됐지만 소련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다.

핀란드와 스웨덴 모두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둘 모두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나토와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이 파트너십 지위는 나토의 동진을 [동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 효과를 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두 국가 모두의 나토 가입 논의가 진지하게 떠올랐다. 지도를 흘깃 보지만 해도, 나토의 군사 전략가들이 두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왜 반길지 알 수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덕분에 발트3국은 취약하게 돌출된 서방측 국가라는 처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발트3국 정부들은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발트해에서 서방의 군사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응은 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서 나왔다.

4월 14일 메드베데프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에 면한 러시아 국경의 길이가 두 배가 된다. 당연히도 이 국경의 경계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 그러면, 발트해는 더는 비핵지대일 수 없다. 균형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다."

칼리닌그라드에는 2016년 이래로 이 스칸데르 순항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다시 말해,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유럽의 군사적 분할을 가속화할 것이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더 광범한 전쟁의 위험이 커질 것이다. 스웨덴의 집권 사민당은 이 문제를 두고 분열해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좌파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중립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1호 번역 김준호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한 징후들

김준호

4월 16일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대거 폭격했다.

이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모스크바함을 흑해에서 침몰시킨 데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함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을 과시해 서방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마리우폴은 거의 함락됐다고 한다. 그 공격 며칠 전에 푸틴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마리우폴을 점령하려고 벌였던 유혈 참극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 점령하기 위한 작전들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장이 확대되면서 사상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푸틴이 말한 “애초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해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토는 외려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와 인접국인 스웨덴의 나토 가입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4월 14일 핀란드·스웨덴 양국 총리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나토 가입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몇 주 안에 마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핀란드 국경에서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거리는 서울-대전보다 더 가깝다. 러시아로서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14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발트해는 더는 핵 무풍지대가 아니다” 하고 말했다. 같은 날 발트해 연안 국가 리투아니아의 국방부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핵탄두를 배치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현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스웨덴과 마주한 러시아 역외 영토로, 육지로는 폴란드·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곳에 핵탄두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서유럽 전체를 사정권에 놓겠다는 것이다.

나토도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작전을 벌이고 있는 흑해에서 나토군이 러시아군 항공기의 활동을 감시하는 대규모 항공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것이다.

나토의 주도국 미국은 러시아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푸틴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범한 “전범”으로 규정했다. 국무장관 블링컨은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백린탄을 쓸 때는 침묵하던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핏대를 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늘리려는 포석일 것이다.

이에 발맞춰 미국 상원은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무제한 지원하는 무기대여법을 만장일치로 재가동했다. 81년 전 이 법이 제정됐을 때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혈낭자한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다.

항공모함과 순항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아에서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주일 전인 4월 12~14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 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벌였다.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러시아를 압박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도 경계 태세를 높였다. 그리고 푸틴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자국의 핵 전력 경계 태세를 높였는데, 미국은 동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해 이 함대를 견제한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동해에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동해에서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자극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번 연합훈련에는 불참했지만,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협조해 왔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국회 연설 직후 한국 정부는 군수 물자 20억 원어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러시아 압박을 위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도 동참하고 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미국을 편들며 긴장 고조에 일조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마리우폴 폭격으로 유혈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Alexander Khodakovsky

정의당의 젤렌스키 국회 연설 지지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돕는 길이 아니다

4월 11일 젤렌스키의 국회 화상 연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기술과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관련 기사 본지 412호 ‘젤렌스키 한국 국회 연설은 확전에 기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젤렌스키의 국회 연설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젤렌스키가 “무기를 비롯한 지원을 호소”한 데 대해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젤렌스키 국회 연설에 관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수석대변인의 말과 달리 이 전쟁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사투”라고 보기 어렵다. 러시아군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젤렌스키와 서방의 승리도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411호 ‘제국주의 간 충돌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의 패배다’)

이미 젤렌스키 정부는 이 전쟁이 끝나도 “향후 10년은 안보가 최우선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회의 군사회를 공언해 왔고, 배타적 애국주의 프로파간다와 군대 숭상을 부추기며 이를 비판하는 야당들을 탄압하고 있다.

젤렌스키의 연설은 이 제국주의적 충돌에 한국 정부가 더 깊숙이 관여

하라고 촉구하는 셈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방향이다.

‘국익’ 논리

그간 정의당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문제들에서 ‘국익’ 논리를 따라 왔다. 정의당은 한국 국가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지 않았고, 대북 문제 등에서 한국과 미국 중심 ‘국제사회’ 질서 수호를 편들어 왔다.

또, 외교·안보 문제에서 ‘국익’을 유능하게 지키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 애써 왔다.

정의당이 지금은 평화주의적 언사를 발하지만, 그런 논리로는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친서방 태세를 추수해 서방 측 동맹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쉬이 미끄러질 수 있다.

젤렌스키의 요구가 살상 무기 지원인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데에] ... 정의당도 함께하겠다”고 답한 것이 그 한 사례다. 이는 정의당의 평화주의가 일관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한국 등의 (친)서방 정부들과 언론들은 이 패권 다툼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포장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것을 도덕적 책무로 내세우며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런 전쟁 물이에 맞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전주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인구(25~54세) 비율이 OECD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지배자들은 저출생을 크게 우려해왔다.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정학적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병역 인력 감소는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여러 대책

을 내놓았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지만, 다른 한편 양육과 교육에 미미하게나마 지원을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는 여성들의 반감을 샀고, 후자는 항상 필요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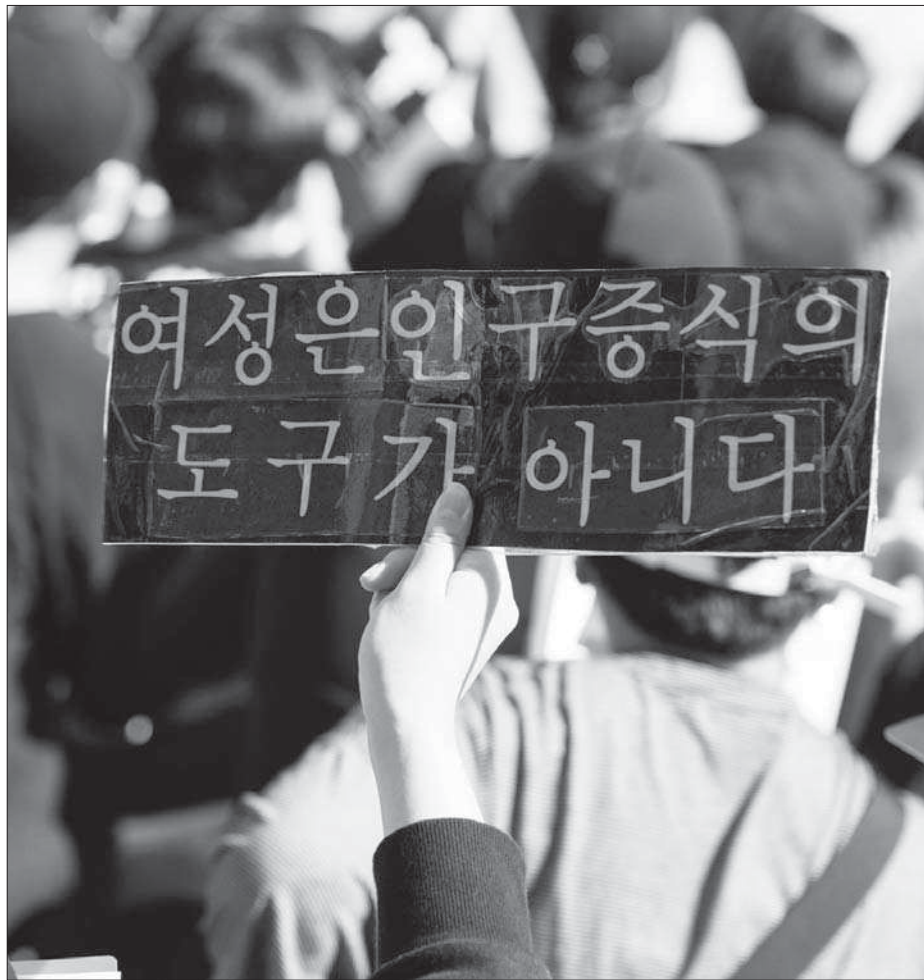
성평등한 저출생 대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족·양육 복지를 짚끔 늘렸을 뿐,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약속은 요란한 말잔치에 그쳤다.

지배자들은 “인구 절벽”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양육 부담을 덜어 줄 복지 확대와 여건 개선에는 늘 인색했다.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정, 특히 여성에게 떠넘기는 데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합계 출산율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18년 9월 비웨이브 주최 낙태권 집회

김민아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저출생 대책

저출생을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윤석열도 비용 부담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가령, 아이 출생 후 1년간 100만 원 지급, 육아 휴직 연장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예산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저출생 대책으로 보육 시설 확충을 약속했지만, 이 예산을 조삼모사식으로 지방 교육 교부금(유치원, 초·중·고 학교 지원 예산)에서 전용하겠다고 발표해 못매를 맞기도 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의 시장주의 노선을 보건대 제대로 안 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은 ‘일-가정 양립’을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유연근무제 확대 같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확

대할 심산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명분 삼아 규제 완화, 노동 개악, 연금 개악도 밀어붙이려 한다.

한편, 윤석열의 저열한 여성 인식도 문제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대신 ‘인구가족부’ 신설을 기획한 바 있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인물들을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은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고 했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도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고 ‘출산은 애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었던 박근혜의 역겨운 ‘저출산 대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산 여부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

지배자들과 보수 언론은 여성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문제삼지만,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다. 출산 여부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 증대와 청년·여성 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출산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은 ‘문제’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프레임이다. 여성의 출산 기피가 단순히 복지 부족 때문만도 아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에 얽매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변화하는 여성들의 삶, 대중의 의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난다.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고 자의식이 높아졌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도 높아졌다. 피임과 낙태술

이 발달하고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확산되면서 젊은층에서는 성과 결혼을 분리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 2020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설문조사를 보면, 30대 비혼 남녀 중 90퍼센트가 결혼을 ‘선택’이라고 답했다.

비혼·동거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대중의 의식 변화는 유의미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문제시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으로만 늘리고, 결혼의 의미를 강조한다. 보수적 가족 사상을 계속 유포하면서 비혼 출산 지원을 꺼린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여성의 선택으로 인정되고, 양육은 개별 가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적 불평등과 여성 차별,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인 지배계급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다

대선 결선 투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다

4월 16일 프랑스 곳곳에서 수만 명이 프랑스 정치·사회를 오염시킨 인종차별에 맞서 집회를 벌였다.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과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경합하는 4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집회다.

시위 조직자들은 파리에서 약 4만 명이, 전국적으로는 1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1만 3600명, 파리에서 9200명이 행진했다고 발표했다. 파리에서는 행진이 끝날 무렵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현수막을 찢고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극우를 막을 방벽을 자처하는 마크롱이 경찰 특수부대를 투입해 극우에 맞선 시위대를 공격한 것이다.

행진에는 다양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참가했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르펜에게는 한 표도 안 된다”는 슬로건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 표를 마크롱에 던지라고 호소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 ‘인종차별 반대 및 민족 간 우정을 위한 운동’ 공동위원장 프랑수아 소테는 이렇게 말했다. “마린 르펜이 대통령궁에 들어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르펜·마크롱에 맞선 사회적 투쟁을 지금 시작하자” 4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집회

표를 이용해 르펜 집권을 막아라’ 하고 외치지 ‘마크롱을 찍어라’ 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귀결되네요.”

파리 시위에 참가한 에밀리는 <리베라시옹>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크롱 투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르펜 정부보다는

마크롱 정부하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누구를 적으로 삼을지 골라야 해요. 르펜이 집권하면 시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들 너무 겁에 질릴 거예요.”

그러나 행진에 참가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느 후보도 지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생테티엔에서는 수백 명이

마크롱 마스크를 쓰고 “선거 가면극에 반대하는 카니발”에 참가했다. 그들의 구호는 “마크롱도 르펜도 아니다”, “주식 시장에 반대한다”였다. 파리 시위에서 참가한 윌리엄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기권할 겁니다. 선거라는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좌파 정당들이 우리

▶ 7면으로 이어짐

마크롱 투표 호소는 운동을 약화시킨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은 53퍼센트 대 47퍼센트로 앞섰다. 그러나 마크롱의 약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크롱을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여기고 마크롱보다 르펜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물론, 르펜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크롱은 친기업 정책으로 격렬한 증오의 대상이 돼 있다. 마크롱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3년 늦추고자 한다.(르펜은 여기에 반대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고 대책에 관해서는 르펜이 마크롱을 40퍼센트 대 32퍼센트로 앞섰다. 28퍼센트는 ‘모르겠다’ 혹은 둘 다 ‘쓸모없다’고 답했다.

마린 르펜은 실질적 위협이다.

마린 르펜은 그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창당한 파시스트 정당을 계승하는

자다. 이 정당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부역하며 비시 정권을 지지했던 자들, 유대인 혐오자들, 적개심 가득한 인종차별주의자들, 알제리 식민지 전쟁 당시 고문을 옹호했던 자들을 결집시킨 정당이었다. 마린 르펜은 그 이미지를 “세탁”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 본색은 계속해서 드러난다. 예컨대 르펜의 대선 공약 하나는 총기로 사람을 쏘 죽인 경찰관을 형사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르펜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논리를 뒤집고 경찰관과 헌병[프랑스에서는 헌병도 민간 치안을 담당한다]들이 무력 사용에서 자기 방어 추정해 혜택을 입게끔 해야 한다.” 르펜은 이렇게도 말한다. “나의 임금 인상책은 이민자 유입을 막는 것이다.” 르펜은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려 한다. 그리고 낙태

권도 위협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4월 24일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에도 마크롱과 르펜이 똑같이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때에도 기권자는 1200만 명에 달했고 400만 명이 백지 투표를 하거나 투표 용지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투표함에 넣었다. 이를 다 더하면 등록 유권자의 3분의 1이 마크롱 대 르펜이라는 선택지를 거부한 것이다. 지금은 2002년이나 2017년보다 여론 조사에서 격차가 더 좁아서, 좌파 대부분이 마지못해 마크롱을 지지하고 있다.

저명한 좌파 활동가 피에르 테바냥은 이렇게 썼다. “파시스트 연합이 공화국 대권 가도에 올랐다. 그런 상황에서, 르펜의 상대 후보가 극우를 막을 방벽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범죄적인 잘못

이다.

“프랑스의 극단적 우경화를 비롯한 마크롱의 죄악이 무엇이든간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향후 5년을 위해서는, 마크롱에 투표하는 것이 파시스트의 집권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프랑스 주류 정치가 이슬람 혐오, 권위주의, 인종차별적 사상으로 물들고 파시스트 세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파시스트를 막으려면 인종차별적 우파에 투표하라”고 하고서는 그들이 악법을 밀어붙일 때는 내버려 두는 꼴이 되풀이 됐다. 마크롱에 대한 투표는 16일에 시위에 나선 그런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킬 것이다. 차기 정부에 맞서 저항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바로 이

▶ 7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프랑스 국민연립

마크롱의 친기업 정책 덕에 파시스트인 르펜이 평범한 사람들의 편인 척 할 수 있었다

▶ 6면에서 이어짐

에게 마크롱이나 르펜이나 하는 양자택 일을 강요했습니다.”

지난주 마크롱 대 르펜이라는 “찍어 빠진 선택지”를 규탄하며 대학을 점거한 학생들 일부도 행진에 동참했다. 소르본대학교 학생 마리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점거는 잘 한

일이에요. 정치는 마크롱이나 르펜이나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르펜 당선은 끔찍한 일일 테지만, 마크롱이 극우 사상을 막을 방벽인 것도 아닙니다. 마크롱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와 반동적 담론을 주도하는 자입니다.”

▶ 6면에서 이어짐

때 말이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프랑스에 대체로 세 진영이 있음을 보여 줬다.

우선, 르펜이나 역겨운 인종차별주의자 에릭 제무르나 극우 니콜라 뒤퐁-에낭에 투표한 약 1150만 명이 있다. 전체 유권자의 대략 3분의 1이다. 그리고, 마크롱이나 다른 신자유주의 후보들을 지지한 약 1150만 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좌파 혹은 녹색당에 투표한 약 1100만 명이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장뤼크 멜랑송을 지지했다. 1차 투표에서 멜랑송은 청년층에서 1위를 했는데, 18~34세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멜랑송에 투표했다. 멜랑송은 파리 대도시권과 릴·툴루즈·마르세유·몽펠리에 등 프랑스 16대 도시 중 10곳에서 1위를 했다. 하지만 멜랑송은

6월 총선을 준비하라는 것 외에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아무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반 세기 동안 프랑스 공식 정치를 지배했던 주류 우파와 사회당은 1차 투표에서 5퍼센트도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프랑스 정치는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 좌파가 고작 마크롱의 투표 부대에 머무른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됐던 상황, 즉 파시스트의 득표가 느는 상황을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범죄적인 잘못”은 의회 바깥에서의 투쟁과 효과적인 인종차별 반대 정치를 내팽개치고 아무 효과도 없는 자유주의 동맹을 지지하는 것이다.

찰리 김버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1호 번역 김준호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대선

르펜을 저지하려고 마크롱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비록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들이 대부분 한국에 살지만 매우 소수는 프랑스에 살거나 체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독자들을 위해 프랑스 선거에서의 바람직한 투표 행위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는 유럽 정치와 국제 정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지가 르펜은 말할 것도 없고 마크롱도 지지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은 4월 16일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발표된 글이다.

마크롱은 노동자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대표하는 자다. 마크롱은 파시스트가 아니지만, 파시스트인 르펜이 부상할 발판을 마련해 줬다.

마크롱은 노동계급 조직과 희미한 관계조차 없다. 르펜의 상대가 마크롱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자라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그는 13년 전인 2009년까지는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말이다. 현재 그는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이다.)

파시즘은 투쟁과 거리 시위로 막아야 한다. 마크롱을 지지하는 것은 그것에 방해가 된다. 2002년 크리스 하먼은 이러한 기본적 입장을 진술한 바 있다(“[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https://wspaper.org/article/27662>). 당시 상황이 지금과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논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크롱도 르펜도 찍지 않으려는

수많은 변화 염원층이 존재한다.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도 마크롱과 르펜이 맞붙었다. 그때 기권율이 25퍼센트에 이르렀다. 이는 1969년 대선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게다가 아무도 찍지 않은 표와 무효표도 기록적으로 많아서, 등록 유권자 전체의 11.5퍼센트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1차 투표에서 나왔던 무효표 2퍼센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다. 전체 유권자 셋 중 한 명이 파시스트인 르펜도, 은행가인 마크롱도 찍기를 거부했던 것이다.(마크롱은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투자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거기 재임했던 1년 4개월 동안에만도 33억 원을 벌었다.)

급진 좌파 후보 멜랑송도 이런 대중 정서를 잘 안다. 그래서 마크롱을 찍으라고 호소하지 않는 것이다. 옹게도 멜랑송은 르펜을 찍지 말라고만 하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마크롱을 찍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멜랑송은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을 벌고자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때때로 프랑스의 혁명적 좌파는 “페스트도 콜레라도 아니다”는 입장을 유해한 방식으로 취할 때가 있다. 그러나 마크롱 지지로 끌려들어 가지 않으면서도, 마크롱을 찍은 사람들을 포함해 르펜에 맞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거리 공동 행동을 더할 나위 없이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4월 16, 17일에 르펜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득할 기회다.



사진 출처 Victor Méral

“르펜도 아니고 마크롱도 아니다” 학생들에 의해 점거된 소르본대학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인 방법?

이 기사는 4월 1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가 발표한,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10면에 영상 링크 QR코드)의 원고이다. '캔슬 컬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시사용어다.

'캔슬 컬처'는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 학교나 직장,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추방하려는 활동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런 행동 양식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2010년경부터, 한국에서도 2010년대 중엽부터 페미니즘 재부상과 함께 확산됐다. 이해를 돕기 위해 캔슬 컬처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웹툰 작가 기안84의 연재 중단과 플랫폼 퇴출을 요구한 일이 있다. 기안84가 여성 비하적 암시가 담긴 장면을 그렸다는 이유였다.

홀로코스트를 고발한 영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홀로코스트 생존자 로만 폴란스키 감독도 2018년 캔슬 대상이 됐다. 미국과 유럽의 여성단체들은 드레퓔스 사건을 다룬 그의 최신 영화 <장교와 스파이>를 보이콧 했는데, 그가 1977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였다.

2019년 11월, 19세기 말 프랑스의 후기인상파 화가 고갱의 작품들도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런던 국립미술관 등지에서 전시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글들이 <뉴욕 타임스>와 <가디언>지에 실렸다. 그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을 대변하는

2020년 세자르 영화제에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장교와 스파이> 수상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대

기사들이었다.

대학가나 학계에서 볼 수 있는 강연 보이콧도 캔슬 컬처의 사례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스트("TERF")의 강연을 보이콧하거나 연사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거나, 대학 당국에 해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 여성을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트랜스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페미니

스트 저술가 줄리 빈텔 등과 한국의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 등이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

좌파 정치인과 활동가도 캔슬의 대상이다. 영국의 전 국회의원 조지 갤러웨이와 (8년 전 작고한) 노동당 좌파 지도자 토니 벤이 그런 사례였다. 미국의 전쟁 범죄를 폭로해 해외로 망명한 줄리언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문제 삼아 영국 총학생회연합(NUS)이 '노 플랫폼'(강연·출판 등의

금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한국의 좌파 측에서도 캔슬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민중가수 백자와 그의 소속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 보이콧을 요구한 것이 한 사례다.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에 대한 백자 씨의 통속적인 조롱을 이유로 비판을 넘어 배척 운동까지 한 것이다. 노동자연대도 (다른 이유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캔슬 대상이 됐는데, 이 사례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차별에 대한 반감의 표현임에도

이런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이 복잡해진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두고 볼 순 없지 않나 하고 말이다.

실제로 대개 캔슬 컬처는 차별에 대한 반감이 늘어난 것의 한 표현이다.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차별적 언행에 진저리가 나고 그것을 모두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차별 반대 정서가 성장한 것

을 환영하며 그에 공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목적을 가진 나치(파시스트)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아예 배척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차별에 맞서는 데에 좋은 방법일까?

가령 캔슬 컬처의 한 형태인 미투는 성폭력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의사 표현으로 큰 의의가 있는 운동이었다. 그 결과 권력층 남성들이 저지르고 은폐한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의 일부가 드러나고 처벌받았다. 본지를 비

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투의 의의를 높이 사고 지지했다.

하지만 모든 미투가 그 대상이나 내용, 방식이 적절했던 것은 아니고, 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성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그 정도가 덜 심각한 언행들과 관련된 경우에 그랬다.

이 글은 차별 반대 정서에 공감하면서도 과연 캔슬 컬처가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식인지 그 문제점과 대안을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캔슬 컬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많은 우파들의 보수반동적 비판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보수반동적 우파들은 차별 반대 주장과 운동 자체를 캔슬 컬처라고 싸잡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자체도 다 캔슬 컬처라는 식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표현의 자유' 운운은 성차별, 인종차별적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캔슬의 대상

이제 캔슬 컬처의 실제 양상과 효과를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캔슬 대상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캔슬 컬처의 중요한 문제 하나는 차별을 개인의 태도나 행동 문제로 여기고 이를 규탄하고 퇴출시키는 데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경험한 피해를 폭로하고 고발할 때 그 상대는 대개 (기업 경영자나 주류 정치인 같은 권력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개인들이기 쉽다. 보통, 삶에서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것은 편견으로 가득 찬 언행을 일삼는 주변 사람들, 동료 학생이나 직장 동료,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캔슬 컬처 대상의 다수는 보통 사람들이다. 기업 경영자나 편견 가득한 직장 동료나 모두 똑같이 배척 대상으로 취급된다. 사회운동 활동가나 좌파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자신에게 괴로움과 불쾌감을 안겨 준 상대를 고발하고 낙인을 찍고 퇴

출시킴으로써 차별에 맞서 승리했다는 감정,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찍어 낸다고 해서 차별이 실제로 완화되지는 않는다. 차별을 배양하는 물질적 토양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각종 차별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수혜자들과 수호자들에 의해 날로 강화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편견이나 부적절한 감정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차별을 온존시키고 거기서 득을 얻는 지배자들과, 비록 편견에 가득 차 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 차별을 온존케 하는 체제와 지배자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캔슬 컬처의 확산은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 차별의 원인을 개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찾는 정치가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온 일과 관계가 깊다. 오늘날의 여성운동을 지배하는 조류는 개별 성폭력 문제에 압도적 중요성을 두면서

사람들을 낙인 찍고 배제해야 차별 없는 직장,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임금, 일자리, 복지, 여성의 권리(가령 낙태권) 등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 운동을 크게 키우는 것이 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이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 특권 이론이나 정체성 정치도 특정 차별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권력자이자 심지어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치는 개인들의 특별한 언행을 찾아내어 공격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데 차별 반대 운동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도덕주의적 방식으로 차별을 온존시키는 체제와 지배자들에 맞서는 운동을 크게 키울 수 없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감수성을 갖추고 운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수는 기존 사회가 조장한 편견과 혼란스런 의식을 갖고 오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과 공통으로 투쟁하면서도, 편견에 도전하는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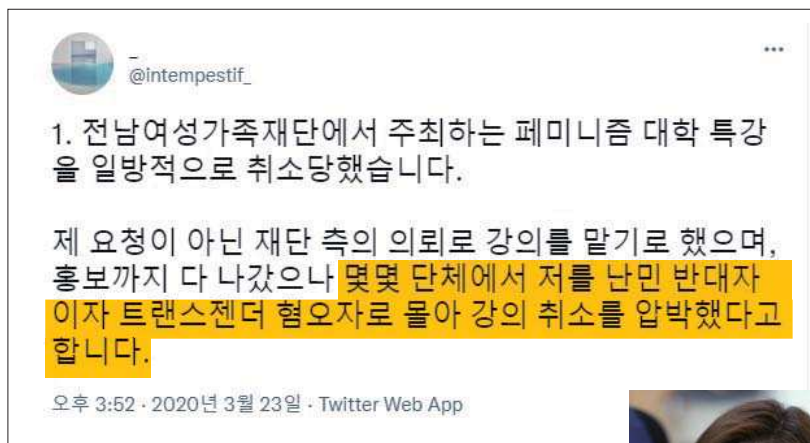
그런 사람들을 낙인 찍고 배제해야 차별 없는 직장,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임금, 일자리, 복지, 여성의 권리(가령 낙태권) 등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 운동을 크게 키우는 것이 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이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편견을 깨고 의식과 언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의 상대적 경중 흐리기

캔슬 컬처의 또 다른 문제는 진짜 폭력과 말(성차별·인종차별적인 언어),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표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장 사이의 경계를 모두 흐린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문제를 뒤섞어 온라인 상에서 고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심지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떤 주장이나 말을 폭력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문제를 부풀리기 쉽고, '무조건 퇴출' 식의 도덕주의적인 과잉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의 자연스럽다.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문예 창작물에 대해 비판을 넘어 출판 금지나 상영 금지를 요구하고, 견해를 이유로 해고를 요구하고, 정치적 이견자에 대해 각종 보이콧이나 배척,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 등이 그런 사례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국회의원 후보 사퇴 요구에 직면한 녹색당 전 비례 국회의원 후보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고(故) 김기홍 씨의 사례는 캔슬 컬처의 과도함을 잘 보여 준다.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스트들은 김기홍 씨가 정치 활동에 입문하기 전인 10년 전에 트위



윤김지영 교수에 대한 강연 보이콧

트랜스젠더 배제적 주장은 좋지 않지만, 이들의 입을 막는다고 트랜스젠더 천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한다



터에 쓴 야동, 소라넷, 몰카에 대한 특정한 언급을 문제 삼았다. 김기홍 씨가 후보를 사퇴한 후에도 온라인 상에서 맹렬한 비난과 트랜스 혐오적 비방이 이어졌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미권 대학에 널리 퍼진 '안전 공간 만들기'는 캔슬 컬처가 정치적 이견을 둘러

싼 토론을 가로막고 재갈을 물리는 문제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원래 '안전 공간'은 베트남 전쟁 반대 활동가들을 국가의 징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캠퍼스를 각종 유해한(누구에게?) 사상과 '폭력'이 없는 '안전 지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변질됐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성노동 등 페미니즘 내에서도 첨예한 쟁점들을 놓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강연을 보이콧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페미니스트의 강연 무산 등 유사한 일이 벌어져 왔다.

물론 트랜스젠더 배제적 주장은 좋지 않지만, 그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천대가 사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공개적 토론과 논쟁으로 반대 견해에 도전하고,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견을 이유로 운동에서 배제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2016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노동자연대 부스를 퇴출시킨 일이 그런 사례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사회적 원인을 '여성 혐오'로 볼지, 아니면 조현병 환자의 특정 증상들로 볼지는 토론할 문제이다. 성소수자 권리를 선구적으로 옹호하며 함께해 온 단체를 견해가 다르다고 밀어내는 것은 연대와 운동을 약화시킬 뿐이다.

거짓과 진실

캔슬 컬처는 분노를 앞세우는 도덕주의와 피해를 주장하는 쪽을 무조건 편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SNS의 특성과 맞물려 빠르게 퍼지면서 특유의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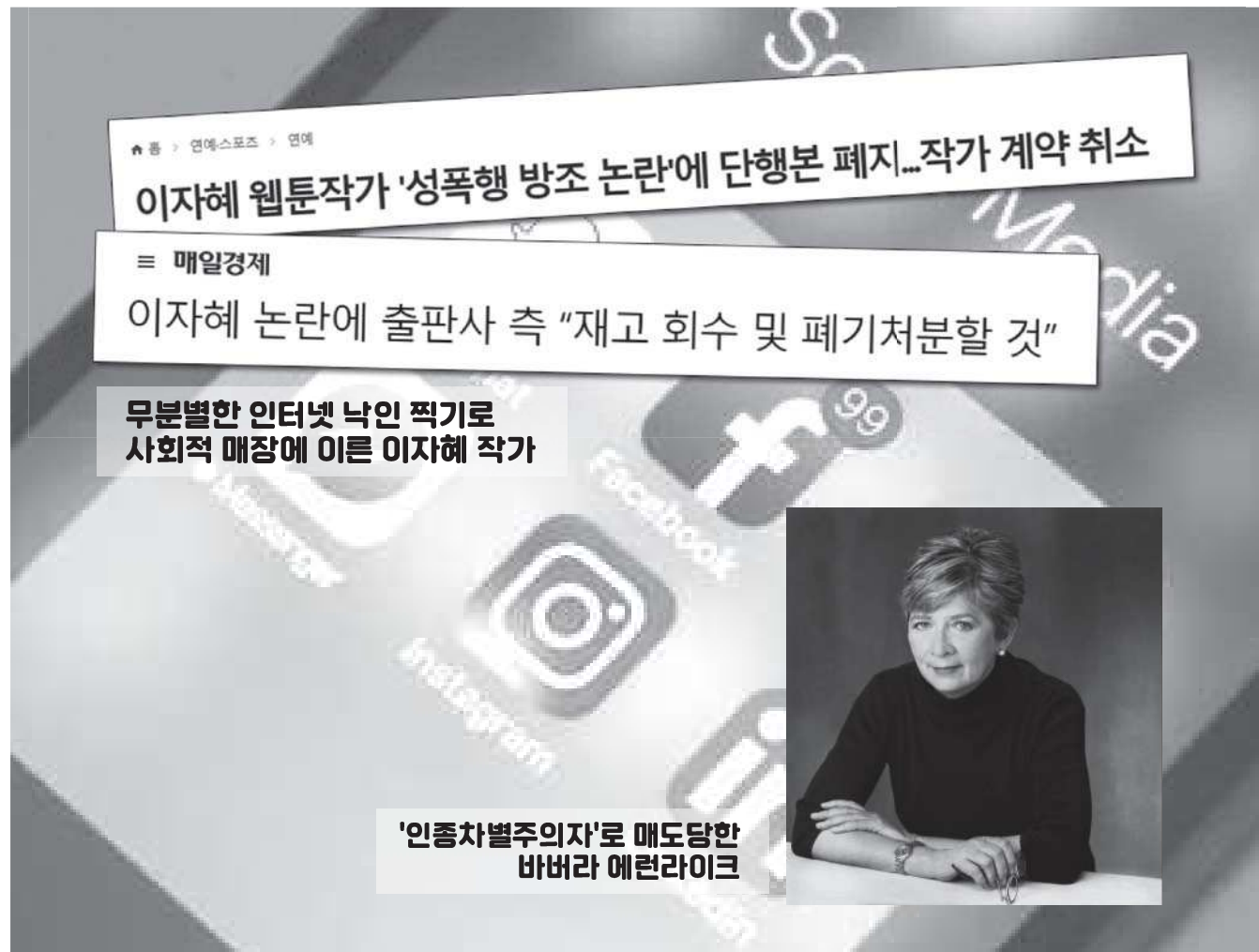
그 문제점 하나는 차별주의자나 가해자로 누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급진적 좌파 저술가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그런 사례다. 에런라이크는 미국 제국주의와 인종 차별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사회주의자로, 한국에도 《금정의 배신》, 《노동의 배신》 등으로 잘 알려진 여성 저술가이다.

몇 년 전 그는 영어 사용과 미국의 쇠퇴를 연결지은 유머러스한 짧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 내용은 이렇다. '영어 못하는 스타의 인기가 높고 영어 더빙보다 자막이 널리 이용된다. 사람들이 다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만 미국의 쇠퇴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캔슬 컬처 활동가들은 에런라이크가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제국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2016년 이자혜 사건은 인터넷에 퍼진 낙인 찍기가 단순한 소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매장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자혜 씨는 페미니스트 투사로도 불렸던 유명한 웹툰 여성 작가인데, 그의 십대 팬이 이자혜 씨의 사주로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그러자 진상이 파악되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비난이 들끓었고, 이자혜 씨의 작품이 폐기되고 그의 그림이 표지로 실린 잡지마저 전량 회수돼 폐기됐다. 이후 강간과 강간 사주 혐의를 반박하



분노를 앞세우는 도덕주의가 SNS의 특성과 맞물리며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곤 했다

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작가가 이미 입은 손해와 고통은 돌이킬 수 없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들은 캔슬 컬처의 이런 문제점, 즉 진상 파악 없이 곧장 낙인 찍고 퇴출시키는 것을 뒷받침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특히, 진상조사와 사실 확인, 당사자의 소명 등을 모두 ‘2차가해’로 몰아 모든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할 기초 절차를 막는다.

합리적 의문에도 재갈을 물려, 필요한 논의마저 위축시키거나 봉쇄한다. 게다가 종종 정치적 경쟁자나 이견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박원순 사건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드

러났다. 사실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게 없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한 한 언론인의 만만찮은 반론도 제기됐다.

오히려 사건의 진실이나 여성운동의 대의에 아무 관심도 없는 우파들이 페미니즘의 무기고에서 ‘2차가해’ 개념을 훔쳐 와 어떤 의문도 불허하며 정적 공격에 이용했다. 이는 위선의 극치였지만, ‘2차가해’ 금기에 스스로 결박된 페미니스트나 대부분의 좌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 무력하거나 심지어 우파 측에 동조했다.

‘2차가해’를 이용한 좌파 내 대표적

캔슬 사례로는 민주노총 중앙 관료들의 노동자연대 배척 결정을 들 수 있다. 〈노동자 연대〉신문의 기자인 필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규정에 근거해 한 지역 간 부에게 양심에 반하는 성폭행 시인 자술서를 쓰도록 종용한 사실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노동자연대가 ‘2차가해’자라며 노동자연대 배척 운동을 전개했다. 사실상 성폭력 사건을 잘못 처리한 치부를 덮으려고 노동자연대를 공격한 것인데, 한두 해 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여성위원회 방침을 수용해 노동자연대 배척을 결정했다.

서로 연대하는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야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캔슬 컬처는 차별 반대 정서가 늘어난 것의 표현이긴 하지만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특정 공동체, 사회에서 거슬리는 언행을 한 개인들을 퇴출시키는 것으로는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 차별을 끝장내거나 적어도 완화시키려면 그것을 유지시키는 체제와 지배자들에 맞서야 한

다. 그 깊고 단단한 뿌리를 공격하고 마침내 뽑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진정으로 대중적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편견에 따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불쾌해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캔슬 컬처는 진정으로 대중적인 운동을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운동을 분열시킨다.

대부분의 좌파들은 캔슬이 낳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 애쓰기는커녕 각종 선거나 기회를 의식해 기회주의적으로 침묵하거나 심지어 기꺼이 배척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를 도덕적으로 낙인 찍고 배척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풍토는 사람들을 반목케 하고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킬 뿐이다.

운동을 키우려면 연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공동의 요구를 위해 폭넓게 함께 행동하면서, 그 속에서 편견이나 이견

을 빚는 쟁점을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연대에 기초한 포괄적인 운동을 구축해야 할 과제는 기회주의와 종파주의를 배격하는 건설적 좌파들에 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보기



2017년 11월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대신하는 구실을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1월 출범시킨 기관이다. 그와 함께 경찰의 규모와 권한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경찰 면책 조항을 신설해 경찰관의 법적 책임을 줄여 주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총기 사용을 권장하는 등 경찰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내내 규탄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추진된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법 통과에는 이견 없이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약화될 것이라며 처음엔 반대하더니 결국엔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

로 합의했다.

경찰이 강화되는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약화됐을까? 그렇지 않았다.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뿐더러 핵심적 권력(수단)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을 나눠 가지며 신설된 공수처는 '검찰2'에 불과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공상적이다. 이름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든, 한국형 FBI로 바뀌든 새로운 기구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본질은 '검찰2'들에 불과할 것이다.

공식적 수사권은 없어졌지만, 국정원도 얼마든지 수사에 준하는 정보 수집과 사찰을 할 수 있다. 테러 방지를 명

분으로 핵심 국가기관들을 동원하는 기획·조정 임무를 여전히 맡고 있다.

결국 부패하고 억압적인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이용해, 또 다른 억압적 권력인 경찰이 더 강력해진 힘을 얻게 돼 온 것이다.

검·경은 상호 간에는 견제 운운하며 권력 다툼을 벌이지만, 피억압 계급들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수단으로서는 협력하는 기구들이다. 기구의 본성이 그렇다.

가령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경찰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검찰이 부패하고 억압적인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1987년 이후 점차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국가 형태가 변모하면서 ('법대로'를 명분으로) 검찰의 상대적 위상이 상승했으나, 그만큼 올라간 것은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원성이었지, 민주주의의 신장이 아니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을 강화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검·경·국정원 등 억압기관들의 억압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경찰청장 지위 격상, 용산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를 추진했고,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4월 13일 민주노총 집회를 록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차벽을 세우고 경찰 1만여 명을 배치했고,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처럼 검·경 간 권한 조정은 피억압 대중에게는 진정한 개혁과 무관하다. 인권 침해 수사 금지 등 두 기관의 부분적 개혁조치 신·구 정부 간 권력 쟁투나 검·경 간 권한 조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 수호 정당들인 주류 양당이 '개혁'을 운운하며 검·경 권한 조정을 놓고 다투지만, (다툼의 끝말이 무엇이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억압적인 권력이 야금야금 강화되는 것이다.

김승주



경찰 당국은 4월 1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차벽을 세우고 경찰 1만여 명을 배치했다

10년 만에 최대 물가상승, 저항이 있어야!

정선영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퍼센트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생활과 관련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5퍼센트나 올랐다.

특히 외식비는 6.6퍼센트 인상돼 24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냉면, 비빔밥은 1만 원에 육박하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짜장면, 칼국수, 김밥, 치킨, 라면, 떡볶이 등도 8~9퍼센트가량 올랐다.

심지어 대학 학생식당의 가격도 올랐다. 올해 1월부터 서울대학교의 백반 메뉴가 1000원 올랐고 국민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메뉴 가격이 500원가량 인상돼 4000~5000원대에 이른다. 학생식당 가려다가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학생들도 있다.

물가 상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된다. 더는 줄이기 힘든 식비 등이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60퍼센트가량이 빈곤층인데, 올해 기초노령연금만 고작 7500원(2.5퍼센트) 올랐다. 장애인연금도 2.5퍼센트 올랐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삭감된 셈이다.

끼니를 때우려고 무료급식소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뱅크의 이용자도 늘었지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진열되는 상품들은 제한되고 있다.

3월에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퍼센트 올랐다. 이 때문에 리터당 가격이 몇십 원이라도 쏠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유가 폭등으로 매달 기름값이 100만~200만 원 이상 늘어나 소득이 반토막이 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과 이윤 논리

지금의 물가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듯하다. 최근의 물가 상승을 낳은 세계적 원자재와 중간재 등의 공급 차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상하이를 비롯해 40여 도시가 전면

소비자 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또는 부분 봉쇄됐다.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반도체·전자 공장 등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물동량이 세계 최대인 상하이항이 차질을 빚으며 다소 진정되는 듯 보였던 물류대란이 다시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과 원자재의 공급 차질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유가는 최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오르고 있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석유와 곡물, 원자재 시장에는 온갖 파생금융상품들이 발달해 있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자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 상승 속에서 투기꾼들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소비재 기업들은 이윤을 지키려고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원자재와 중간재의 비용 상승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고통 키우는 금리 인상과 긴축

윤석열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의 생활고를 털어 줄 대책은 턱없이 부

족하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렸다. 필요한 일이지만 이로 인한 추가 인하폭은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에 불과하다. 지난 1년간 기름값이 리터당 400원 넘게 오른 것에 비춰 보면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경유가 기준 가격(리터당 18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추산을 보면, 이로 인한 지급액은 월 2만~9만 원 수준이다. 화물 노동자들이 경유 가격 인상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

오히려 정부는 공공요금도 인상하며 부담을 키우고 있다. 4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전기는 10월, 가스는 5, 7, 10월에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면 올해 전기 요금은 10퍼센트, 가스 요금은 16퍼센트 오르게 된다.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인상을 앞두고는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사실상 인상을 용인했다.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재정 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요를 억제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고, 한국은행도 지난 1년간 금리를 네 차례나 올렸다.

미국 바이든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5퍼센트 줄이며 긴축으로 돌아섰다. 한국에서도 윤석열이 약속했던 50조 원 추경 규모를 줄여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우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은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수억 원씩 대출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가 1퍼센트만 올라도 가구당 이자 부담이 한 해 수백만 원씩 늘어난다.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로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 긴축을 추진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는 더욱 삭감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또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겨우 1.4퍼센트만 올려 실질임금이 크게 삭감됐는데, 정부의 긴축 기조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억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13면 하단으로 이어짐

물가 인상이 신흥국의 저항을 촉발하다

물가 인상으로 고통이 커지자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 연일 부패한 대통령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8.7퍼센트나 올랐고, 음식과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의 물가는 30퍼센트나 치솟았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4월 10일에 총리가 퇴진했다. 심각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으로 커진 대중적 불만이 배경이 됐다.

페루에서는 연료와 비료, 식품가격 등이 급등하자 트럭 기사들과 농민들이 지난달 말부터 고속도로 봉쇄 시위를

벌였고, 정부가 통행금지령을 내리며 탄압하자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경제난이 계속된다면 더욱 많은 나라들에서 저항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저항이 크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2011년 물가가 오르며 식료품 가격이 치솟자 아랍의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아랍혁명이 벌어졌다.



사진 출처 Samag, Jana Balawegaya

대통령 퇴진하라! 물가 폭등, 식량과 생필품 부족 상황에서 거센 시위가 벌어지는 스리랑카

▶ 12면에서 이어짐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물가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들의 생필품 가격 인상을 규제하고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물가 안정시켜야 한다. 시장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임금이 올라야 한다. 올해 1월 설 명절 보너스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4퍼센트가량이었는데,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한 것이다. 임금 인상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낮추려 한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부문별로 이간질하며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전체 계급적인 관점에서 단결과 연대 투쟁의 전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해 경기 회복 속에 대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50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200조 원이 훌쩍 넘었을 것이라고 한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져야 한다.



관련 영상
[시사/이슈 토크]
물가 왜 치솟나? 대안은?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고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현장에 가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은 절실한 문제다.

코로나19 방역, 구제역, 조류독감 등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사망하고, 쿠팡물류센터 등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 공무원들이 또 안타깝게 사망한 소식들이 지난해와 올해 계속 이어졌다. 지난 9월 사망한 인천 부평구 보건소 주무관은 초과근무만 월 117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순직 사망자는 무려 341명이나 된다. 그중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람만 113명이다. 이는 순직 사망자의 33퍼센트에 해당한다(과로사 신청 건수 185건 중 113건 인정).

자살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5명으로 순직 사망자의 10퍼센트가 넘었다(자살 순직 신청 건수 105건 중 35건 인정).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비율을 가리키는 자살 산재율은 공무원이 일반의 2배나 된다(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 자살 산재,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

질병 재해도 2017년 283명, 2018년 247명, 2019년 474명, 2020년 549명, 2021년 60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질병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과로와 관련이 깊다.

대다수 과로사와 질병 재해는 인력 부족에서 비롯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무원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 속에 희생하고 헌신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인력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는 땀방식 대응만 해 왔다. 보건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임시로 파견하는 식으로 말이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

대다수 친기업 언론은 공무원이 증원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커진다고 한다. 윤석열의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나 각종 재해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충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해서도 공무원의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이를 단순히 인건비로 환원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윤 논리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가 재난 관리 예산을 축소하면서 선박 좌초 시 대처를 담당하던 수색구조계를 없앴 것이 세월호 참사 대처에 무능했던 한 가지 이유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의 '작은 정부'는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야 한다.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순직	과로사	자살	질병 재해
2017년	73명	21명	7명	283건
2018년	76명	13명	7명	247건
2019년	65명	31명	4명	474건
2020년	65명	18명	7명	549건
2021년	62명	30명	10명	602건
합계	341명	113명	35명	2055건

과로사를 막으려면 공무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공무원 산업재해 통계

출처: 용혜인 의원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① 노동자 연대 ② @wspaper ③ wspaper_org ④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⑤ “노동자 연대” 검색 ⑥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꼭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7

세계 좌파들의 공동 성명 탄압받는 쿠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2021년 7월 11일 쿠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참가자들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쿠바 국내의 수많은 사회 단체 및 좌파 활동가들과 람치령, 로버트 브레너,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로잘리아 자말로바, 미카엘 뢰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에티엔 발리바르, 존 몰리뉴, 파노스 가르가나스 등 해외의 저명한 좌파 활동가·지식인들이 저항 참가자들에 연대하는 공개 서한에 연서명했다. 한국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연서명에 동참했다. 연서명에 동참한 개인·단체들의 전체 명단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쿠바 민중과 국제 좌파에게
쿠바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 탓에 생활 수준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2021년 7월 11~12일 쿠바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미국은 공세·봉쇄 정책 속에서 60년 넘게 쿠바를 가혹하게 제재하고 있고, 쿠바 정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복합돼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설명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생필품을 — 대다

수 사람들이 구할 수 없는 — 외환으로 거래하도록 한 결정과 팬데믹이 끼친 영향은, 빈곤·주변화·주거·피부색·성별 등 여러 이유로 배제된 부문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켰다. 지금 쿠바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사회의 의료·교육·스포츠·문화 지표가 점차 하락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런 사회적 퇴보는 청년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로 이어졌고, 이는 쿠바 가정들과 경제 일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7월 시위는 1959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였다. 이 집회에서 경찰과 친정부 시위대가 한 편이 돼 일부 반

정부 시위 참가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공식 발표와 불비례한 형량에서 입증되듯, 후자는 범죄시됐다.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보안부대와 국가 관료들 같은 친정부 부문이 자행한 탄압과 국가 폭력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2022년 3월에 시위 참가자에 대한 재판이 두 번 열렸다. 첫 번째 재판은 아바나의 빈민 거주 지역 에스키나데 토요와 라귀네라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재판이었다. 127명이 한꺼번에 받은 재판에서 최대 형량은 30년이었고,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더하면 무려 1916년에 이른다. 이 중 8명은 16~17세였다. 두 번째 재판은 산안토니오데로스바뇨스 집회 참가자 17명에 대한 것으로,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 6년형을 받은 요안 텔라크루즈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텔라크루즈는 최초로 SNS에서 시위를 실시간 방송했던 청년 중 하나였다. 판결문은 다음 같았다. “그는 시위 상황을 소셜네트워크에 실시간 방송해, 그런 행동이 국내외에 알려지게 했다. 그 결과 쿠바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해로운 행동을 모방하게 됐다.”
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총 790명이 기소됐고 그중 55명은 16~17세였다.

이와 동시에, 여러 시민사회 부문과 활동가들이 정부 당국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런 박해와 감시는 경찰 보안 기구가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 위에서 행동하며 대중의 존엄을 무시하는 기구들이다. 이 모든 일은 공적 영역 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민사회 단체들에 결사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국가 기관의 범죄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을 이용해 탄압의 고리를 완성하는데, 언론은 시위 참가자들을 비방하고, 모든 반대 의견들은 다 돈으로 매수된 것이라고 낙인 찍으며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개인·단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우익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우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성명에 동참한 쿠바 국내외 개인·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불의하게 형을 선고받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국제 연대를!
● 불의하게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모두를 사면하라! 이는 진정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주의로 가는 문을 열 필수적 단계다.

출처 Solidaridad11J
번역 최병현

독자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 동구에 정착했다.
그 후 4월 초 울산에서 SNS를 통해 동영상 2개가 돌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 옆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SNS상에서 몇몇 사람이 아이가 차를 던지고 추측하며 난민 혐오 발언을 했다. 한 우파 언론은 이를 기사화해 혐오를 부추겼다.
나도 영상을 보며 아이의 행동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도둑으로 볼 수는 없었다. 우선 도둑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또한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얼마 뒤 이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가족의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졌

다. 그러자 혐오 발언이 쏙 들어갔다. 우파 언론도 해당 기사를 황급히 내렸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난민 혐오를 반대하는 글도 올라왔다. “뭘 기자들이 팩트 체크도 안 해보고 혐오를 부추기고 다닐까요”, “진짜 혐오의 대상 기레기들이 가짜 혐오를 남발하고 있죠”, “우리 나라에도 차에 낙서하는 애들도 있고 별의별 특이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한두 명 이상한 걸 가지고, 프레임 짜서 전체가 그렇다고 몰아가는 짓은 지양합시다”.
주변 사람들과 난민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때에도 난민 혐오가 전반적인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감시
어린아이의 특이한 행동을 양방향에서 녹화하고 유포한 사람들과 혐오 발언을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대해 참으로 화

가 났다. 이 정도면 그들을 감시하는 수준이다.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무서울 것 같다.
난민들은 이렇게 감시하고 적대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다. 당연히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특히 난민들이 세금을 낭비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이윤을 창출한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를 사는데 수십·수백조 원의 돈을 사용한다. 이것야말로 진정한 세금 낭비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자녀 중 장애인이 4명 있는데 아직 장애인 등록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거나 자랑하며 데려온 것에 비하면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이다. 내 딸은 난민이 있는 반의 바로 옆 반이다. 난민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다. 오히려 내 딸이 난민들과 친해지기를 바란다. 나도 난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들이 회사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나설 것이다. 그것이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4중 위기(경제, 지정학, 감염병, 기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위기의 책임은 지배계급에게 있다. 난민 차별과 혐오는 이런 위기가 낳는 고통의 책임을 지배계급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돌려 노동계급 내에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난민 혐오뿐 아니라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배자들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들과 더 가깝게 지내며 그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 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실 간 철창을 없애 보호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주간에는 운동장을 상시 개방한다. 인터넷 실 사용 시간 제한도 없앤다고 한다.

물론 “개방형”이라는 말은 과장이다. 보호소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는 구금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신청자에게 ‘새우깡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후, 법무부가 그 대책의 하나로 내놓았던 것이다. 작은 개선이지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이 보호소의 열악한 조건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항의해 온 성과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억압적인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항의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연서명한 성명서를 작성해 외부로 알리고, 국가인권위나 국제기구 등 제도적 수단들을 활용하고, 단식을 하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보호소 측이 아픈 동료를 외부 병원에 보내주지 않자 집단적으로 시끄럽게 항의하며 치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보호소 바깥에서 연대 단체들(지속적으로 화성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며 구금자들을 접촉해 온 ‘마중’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런 소식을 파악해 꾸준히 공론화하고 정부에 항의하며 때로는 캠페인도 벌였다.

그러나 여전히 싸워서 얻어 내야 할 것이 많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변화의 동력 지난해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깡기’ 고문 사건 규탄 거리 행진

우선 이번 조치는 여성보호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마중 활동가에 따르면 여성보호동 2곳 중 1곳만을 개축했다고 한다. 또 마중의 ‘2020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 보고서’를 보면, 여성은 전체 구금자의 약 33퍼센트였다.

또한 외부 병원 방문 제한, 질 낮은 급식, 샤워실 온수 사용 제한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전한 과제

한편, 지난 2월 법무부가 전신 결박 의자 등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고 한다는 사실이 폭로됐는데, 이번 조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보호소 내 철창을 없애는 대신 더 억압적인 장비 사용과 징벌로 구금자들을 통제하려는 것일 수 있다.

폭로된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달리 현재도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이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휴대폰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사용 장소를 휴대폰실로 제한한 것은 내부 시설이나 인권 침해 사건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무엇보다 장기구금의 문제가 여전하다. 아무리 내부 시설이 개선돼도 장기구금은 삶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고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

장기구금자 중에는 특히 난민 신청자들이 많다.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는 난민 심사나 소송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새우깡기 고문 사건 대책’에서 이번 조치와 같은 대안적 보호시설을 장기적으로 모든 시설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미지수다.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조건과

인권 침해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법무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법무부가 새우깡기 고문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해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피해자가 보름간 단식을 하고 연대 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행진을 벌이는 등 항의가 지속되자, 법무부는 사건 폭로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석방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대다수 이주민들은 가난과 박해, 전쟁 등을 피해 한국으로 와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 범죄자가 아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지속적인 항의와 연대를 건설해 더 많은 개선을 이뤄 내야 한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전쟁, 평화, 평화주의

4월 28일(목)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공저자

참가신청 bit.ly/0428-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